

지역 소식통

정읍시, 공설 시장 사용료 50%감면 전통시장 살리기

정읍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설 전통시장 내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전통시장 내 상인 지원 대책으로 신태인시장과 연지시장 등 지역 내 2개 공설시장 상가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전통시장 사용료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악화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시행하는 정책이다. 작년에는 3월부터 5월까지 30%를 감면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는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공설시장 내 163개 점포가 혜택을 받게 되며, 이 경우 매월 293만원을 감면해 연간 약 3,200여 만원이 감면된다.

시는 이번 상가사용료 감면을 통해 운영난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경영 부담과 경영 위축에 따른 상실감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농식품산업 체계 구축

전북 고창군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체계 구축에 총력을 펼친다. 군은 5개 분야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 △마을경제체 경쟁력 강화사업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에 전체 사업비 78억원 상당을 투입해 30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올해 '고창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총사업비 70억원)'이 본격도에 오른다. 생물관보전 브랜드강화와 차별화 요인을 발굴하고, 높을고창 공부가공센터 구축과 높을고창 스타트업 지원, 명품기업 육성 및 유통네트워크 시스템 등이 구축된다. 여기에 선순환 경제 지역 먹거리 복지서비스 구축, 전통 향토 음식문화 계승 지원화, 비대면 홍보 플랫폼구축을 위한 미디어 시설구축 및 인재양성 등도 진행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대미실업, 행정소송 승소

정읍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 부정적 통보 처분 전주지원 "조례조항에 따른 1km 이격거리 제한이 적용될 여지 없어 위법"

(유)대미실업이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의 부정적 통보처분에 불복하여 전북지방환경청(피고보조참가인: 정읍시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달 28일 전주지방법원 본원 제1행정부(재판장 최치봉 부장판사)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정적 통보처분에 불복해 (유)대미실업이 제기한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법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기물관리법 및 국토계획법 관련 법령 등의 규정으로 종합하면 해당 사건 처분을 뒷받침하는 적법한 법률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사업계획상 시설에는 조례조항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이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시설의 입지 등이 이격거리 제한 관련 법령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보조참가인인 정읍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도시관리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어 야 한다는 정읍시의 주장에 대해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보고 "건강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실제법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원고에게 한 폐기물처리사업 계획 부정적 통보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해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인 정읍시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법으로 발의한 정읍시의 회(발의:이복형 의원)는 이를 재개정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해 큰 오명을 남기게 됐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서 부정적 통보가 취소되면 업체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입안제안서를 정읍시에 제출할 계획으로, 해당 사업 허가를 거부한 정읍시의 명분은 사라질 전망이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해 3월 20일 (유)대미실업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4월 1일 타법저촉 여부를 정읍시에 검토, 의뢰했다.

이에 정읍시는 같은 달 24일 정읍시의회 이복형 의원이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통해 마을에서 1km 이격거리를 제한하는 법

안에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을 추가하여 의결해 5월 8일 조례를 공포했다.

정읍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사업지 입지 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적합해야 건축허가 등이 가능하다"고 5월 12일 전북지방환경청에 회신했다.

이어 전북지방환경청은 정읍시의 "타법에 저촉되어 입지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바탕으로 5월 21일 부정적 통보를 해 사업자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정읍시가 사업자의 해당 사업계획을 막기 위한 무리한 조례 개정으로 주민 재산권 제한과 과도한 규제 등 경제활동 침해 소지의 과잉법안 논란을 일으킨 것으로 간주된다.

(유)대미실업 관계자는 "공공의 목적을 갖고 현재 전국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14개업체가 있지만 주변마을에 별다른 영향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사태를 겪어 오면서 단 한 번의 감염성 사고도 없었고, 앞으로 절차는 남아 있지만 인근마을 주민의 피해 최소화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동물복지 수준 향상 명품 축산물 생산한다

정읍시, 인증 컨설팅 확대 추진

정읍시가 동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자유를 보장해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다.

가축이 활동할 적정 공간 확보와 채광과 환기 등 엄격하게 정해진 조건을 갖춰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받기 위한 컨설팅 지원 분야로는 기반조성과 경영 역량 강화, 6차 산업화 등 3가지로 구분된다.

동물복지 인증기관에 맞추기 위한 시설과 운영개선, 질병 예방 프로그램, 상품 아이덴티티 개발·판매 등의 컨설팅

이 제공된다.

시는 올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신규 희망 농가 3개소를 선정해 농가당 1,000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육관리 방식 전환에 따른 생산성 감소와 질병 관리 계획, 판로 확보 등 문제점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가축 사육 환경을 개선해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는 동물복지형 축산 실천 농가를 확대 육성할 것"이라며 "소비자 신뢰를 받는 명품 축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정읍지역 내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는 육계 농장 13곳, 산란계 농장 1곳 등 총 14개 농장이 인증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는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슬레이트 지붕 교체 하고 있다.

부안군, 카드형 부안사랑 상품권 출시·판매

1인당 월 50만원 한도, 최대 200만원까지 충전

부안군은 지역주민에게 부안사랑상품권 이용편의 제공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월 1일부터 카드형 부안사랑상품권을 출시·판매한다고 밝혔다.

카드형 부안사랑상품권은 사용자에게는 사용 편의성과 구매할인(10%), 소득공제(30%) 등의 혜택이 있고 사업주에게는 번거로운 환전 불필요, 매출증대 등의 효과가 있다.

카드형 부안사랑상품권은 충전식 선불형 카드로 1인당 월 50만원 한도, 최대 200만원까지 충전할 수 있다.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등 관내 37개 금융기관에서 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고 모바일앱(고창사랑페이)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또 지류상품권은 가맹점에 한해 사용이 제한된 반면 카드형 상품권은 카

드단말기가 설치된 관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관외지역과 대규모 점포,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올해 카드형 상품권 발행규모는 총 200억원으로 이번 첫 발행은 시범운영 차원에서 35억원을 발행하고 향후 판매 및 사용 추이를 감안해 165억원을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내년부터 이미 발행된 지류형 상품권 자연감소 유도과 함께 전면 카드형 상품권으로 전환하는 방침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류형 상품권의 비효율성 및 불편을 해소하고 상품권 부정유통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드형 상품권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마늘·양파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 2월 17일까지

정읍시는 기후 변화와 경작 농가 증가에 따른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

대상 품목은 양파와 마늘로 1월 27일에서 2월 17일까지로 신청·접수 기간을 연장한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가격 변동성이 높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그 차액을 90%까지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또, 출하 약정 농업인이 시장거래(산지 폐기)를 신청했을 경우 소득 보전 단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석면 함유 슬레이트 철거 지원

정읍시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슬레이트 지붕 교체에 본격 나선다.

시는 올해 총 9억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석면 함유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를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한 주택 200동과 비주택 45동, 지붕개량 28동이다.

주택의 지원금액은 최대 344만원이고, 지붕 개량은 최대 300만원이며 지원금액 초과 시 자부담이 원칙이다.

다만,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주택철거는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 시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축사와 창고 등 비주택 소규모 건축물은 1동당 슬레이트 지붕 면적 200㎡ 이하까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빈집 정비사업과 자가 가구 주거급여 사업 등 타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해당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있어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이라며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